

부여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수용*

박진희**

Reluctant Acceptance of Regional Identity by the Local Residents of Buyeo

Jin-hee Park

요약 : 지역정체성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공간의 사회적 구성론의 대두와 더불어 지역정체성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특정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점차 지역개발방식이 하향식 개발에서 상향식 개발로 변화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주민참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역정체성 역시 지역민의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시의성이 있다고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백제의 수도'로 널리 알려진 부여군을 사례지역으로 삼아 부여 주민이 지역정체성에 대하여 갖는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지역마케팅이나 지역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지역관측에 적합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수용'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정체성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정체성 형성에 관한 논의와 부정적 수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백제의 수도'라는 부여의 지역정체성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셋째, 지역정체성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정체성에 대해 주민이 가진 태도를 파악하였고, 왜 부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 수용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불만이 있는 '소극적 수용' 계층,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거부하지 못하는 '비판적 수용' 계층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역 주민이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원인과 정책적 원인이 작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 정통성과 경제적 이득, 정서적 자부심 때문이다.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정적 수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 논의에서 그간 관심이 저하였던 지역주민의 입장에 주목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정체성에 대하여 반드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 다른 학문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부정적 수용'이라는 개념을 지역정체성 논의에 적용하였다는 점,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지역 주민의 입장을 다루었다는 점 역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지역정체성, 부정적 수용, 소극적 수용, 비판적 수용, 부여, 지역 주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토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출간된 논문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Abstract : Regional identity is defined as a unique characteristic distinguished from other region and is considered naturally form. But with the social construction of space, regional identity is regarded that it can be reinfor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But as the way of regional planning is changed from top-down to bottom-up process, opinion of local residents became important. Therefore, his study departs from this perspective and aims to investigate regional identity through opin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Buyeo, known as 'capital of Baekj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uyeo residents thought about regional identity. The following 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ly, the discourse of regional identity is combined with region development strategy and has been focused developing identity that is proper selling region. In the process, opinion of local residents is not important relatively. In this research, want to understand local residents' thought through 'reluctant acceptance' that applied other department. So reviewed reg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discuss on reluctant acceptance. Secondly, the regional identity doesn't emerged naturally but formed and reinfor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based on historical authenticity. Government has pushed identity of Buyeo to 'capital of Baekje' by setting reservation area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excavation, development of Baekje Cultural Land, and designating Buyeo as kodo(former capital) Thirdly, conduct a survey and depth interview. With survey, I figure out local residents' stance about regional identity and why they think like that. The reason is economy and policy. These results show important implementations for discourse of regional identity. This research focused on perspective of local residents` position that has low interest previous and reveals local residents' feeling using empirical method. The concept of 'reluctant acceptance' used other department applied in discourse of regional identity and studied local residents' position low interest relatively. These results show important implementations for discourse of regional identity. This research focused on perspective of local residents` position that has low interest previous and reveals local residents' feeling using empirical method.

Key Words : regional identity, reluctant acceptance, passive acceptance, critical acceptance, Buyeo, local resident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지역정체성은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닌 영역으로 한 지역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그 지역의 고유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때 지역정체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경험의 산물이며, 주민의 공동체적 직접 경험이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정근식, 1996).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론에 따르면 지역정체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이다(조아라, 2007). 점차 지역정체성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지역개발이나 관광과 결합한 지역브랜드사업, 지역마케팅사업과 연계되어 확산되었다. 그러나 지역정체성 논의에서 지역 주민의 역할은 지역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주체라기보다 지역 정책에 협조하는 대상이거나 수립된 정책을 수용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주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토목이나 건설에서 관광이나 문화 위주의 전략을 채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과연 지역 주민은 무조건적으로 정책을 수용하거나 협조하고, 지역정체성 형성에 방관자적 역할에 머무를 뿐인가? 지역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이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최근

지역개발의 흐름인 상향식 발전 패러다임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주민이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주민이 지역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정체성의 수용'이 성립가능한 명제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형성되는 지역정체성의 경우 지역 주민이 거주하면서 형성하는 그 지역만의 특성이므로 그 개념을 주민과 분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컨설팅업체가 지역정체성 형성이나 재구성 전략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변화시켰을 때, 지역 주민은 지역정체성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이 존재하는가?

1 - 1.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인가?

1 - 2. 이 계층은 왜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가?

2)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부여군¹⁾으로 선정하였다. 부여는 백제 성왕 16년(538년)부터 멸망(660년)에 이르기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수도였다. 그러나 백제의 멸망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정립사지와 부

1) 특히 백제의 옛 수도지역으로 알려진 관북리, 구아리, 구교리, 쌍북리, 동남리 일대를 중심연구지역으로 하였다.

소산성, 청마산성 같은 여러 성터와 절터, 다수의 고분 외에 백제의 고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적(古蹟)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수도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기에 부여는 오래도록 지방의 한 소읍으로 머물러 있었다.

1900년대 초까지 1000여 명이 거주하는 소도시였던 부여읍의 경관이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제는 조선 강점의 백제와 일본의 친연성에서 찾았으며, 백제의 고도였던 부여를 '내선일체의 영지(靈地)'로 삼아 신궁을 지을 뿐만 아니라 신도(神都)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에 간결한 도로망과 한산한 농촌취락을 형성하고 있던 부여읍이 광장 11개소, 계획가로 37개 노선 등이 포함된 근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이 무렵부터 부여의 관광지화도 시작되었는데, 신문기사나 기행문으로 부여가 경주나 평양과 같은 유서 깊은 도시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때 동시에 부여 8경과 같은 명승지의 소개를 통해 부여를 백제의 고도이면서 근대 관광지로써 의미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발굴작업도 이루어져, 잊혀졌던 유적의 재발견과 발굴이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졌으며, 부여읍 일원은 일제강점기 이후 10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루어졌다(국립부여박물관, 2009).

1980년 이후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백제 역사와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제유적의 발굴이 활발해졌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0년대 중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4년 「고도보존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부여의 사비왕궁지구는 2009년 고도보존사업의 시범지구로 지정되

었다. 현재 부여 사비왕궁지구는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되어 경관정비 및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부여 지역은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성이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주민들의 정주공간 확보나 삶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 결과 주민은 '백제의 고도'에 거주한다는 자부심은 높지만 지역경제 침체 및 재산권의 침해라는 피해의식에 시달리게 되었고, 경제적인 피해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여 주민이 지역정체성에 대해 갖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 계층이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정체성 관련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지역정체성 논의에서 주민을 고려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어 지역정체성의 수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지역정체성에 대한 주민의 수용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적지만, 정책 분야에서는 주민의 수용에 관해 논의된 바가 있으므로 정책학 분야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역정체성의 수용'에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수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부여 관련 자료를 통해 부여의 지역정체성 형성 및 확립과정을 살펴보았다. 부여는 일제

강점기 이후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이 강력하게 자리잡았고, 백제의 고도라는 점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불가피하게 유·무형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는데, 이 손실로 인해 지역정체성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거주민이 지역정체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2012년 2월부터 진행된 심층면접에 기초하여 도출하였고, 연구에 적합한 17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연구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012년 2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이루어졌다.

2. 이론적 배경

1) 지역정체성과 주민

한때 지역정체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경험의 산물이며, 주민의 공동체적 직접 경험이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정근식, 1996).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론에 따르면 지역정체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기보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계에 따라 형성되어 온 것이다(조아라, 2007). 즉, 지역정체성은 정적이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동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인 것이다. 나아가 지역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공동체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어 이것을 실제 세계에 투사하여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되고 유지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Passi, 2004).

즉, 지역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으로,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김주원, 2002). 또 지역민들로 하여금 지역이란 범주 안에서 일정하게 지향성을 갖고 행동하도록 하며, 다른 지역과의 대비·경쟁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소속감’, ‘동질성’, ‘통일성’을 갖게 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갖도록 한다(심재호, 2000). 즉, 지역 정체성은 특정한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역사성, 지형적 특성 등)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동질감과 외부와의 차이를 통해 형성되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다양한 특성을 통일성 있게 연관시켜 지역정체성을 구축한다.

Raagmaa(2002)는 지역정체성의 구성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지역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통하여 형성되나 심지어 소멸되기도 하고, 사라진 지역이 부활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법은 현재 지역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어 온 것인가에 대해 유용한 연구질문과 분석틀을 제공해준다. 이강형·문종대(2006)는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공간적 유대’,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지역에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는 ‘정서적 유대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적극적 관여도’, 그리고 개인 자신과 지역을 인지적으로 동일시하는 ‘인지적 유대감’ 등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병조(2010)는 지역정체성이 수적유일성과 내적 동일성을 근거로 성립된다고 보았다.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형식적으로 하나의 지역 범위로 묶이고 이러한 특성을 ‘지역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때 지역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적, 집단적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 내·

외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력관계가 개입된다. 각 주체간 갈등과 대립하는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경현(2012)은 지역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념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지역민들 사이에서 하나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나 강도에 있어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정체성이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추명희, 2002; 김준, 2002; 홍석준, 2003; 이영민, 2006; 조아라, 2007)하거나, 해당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지역정체성을 파악하는 연구(최협, 1998; 김지희, 2004; 윤택림, 2008),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밝히는 연구(김한배, 1994; 김용만, 1995; 류연수, 1997; 김주원, 200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점차 지역정체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정록, 2001)나 형성과정을 도식화하려는 시도(임화자, 2005), 지역정체성을 변수로 삼아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려는 연구(이강형 · 문종대 2006) 등이 이어졌다.

지역정체성을 정의하는 이상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면, 자아개념을 의미하는 정체성에서 유래하였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적 등질성과 외적 차별성으로 구성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특성이며,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공유된다기보다 사회적 담론을 통하여 전파되고 구성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정체성을 이해할 때, 지역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주민에게 이해되고 공유된다기보다 지역담론을 주도하는 주체의 노력으로 주민에게 알려지고 공유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소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정체성 수립을 목표로 하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또는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전문마케팅조직이나 행정조직 내에서 결정된 사안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개발정책을 비판하거나 지역개발전략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많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에 기반하여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만이 되풀이되고, 지역의 구성주체인 주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게 된 것이다. 즉,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쟁력 있는 장소자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은 지역발전전략을 구현하고 각 주체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즉 지역이라는 삶의 공간을 연구할 때 공간을 발전시키고 유지해 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분석이 공간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정혜숙 · 김혜순, 2004)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구동희(1999)나 정병순(1999)은 기업가적 정부와 사적 자본이 유도하는 개발 정책 속에서 구성되는 장소정체성을 거주민의 입장에서 비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발 정책과 장소전략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자

하는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한 경험적인 사례연구는 많이 부족하다(박서영, 2004). 지역정체성 논의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연구(남상희, 2001; 박서영, 2004; 박우주, 2009; 이정현, 2012)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정체성의 형성 또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는 주민의 역할이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또는 개발계획을 주도하는 주체에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개발론에서는 지역마케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참여의 자발성은 물론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양적·질적 파트너십이 보장된다면 지역마케팅의 지속성은 물론이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 의식도 고양될 것으로 본 것이다(신성현,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지역정체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거나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민이 지역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들여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지역정체성의 수용

‘지역정체성의 수용’에 관하여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은 과연 이 개념이 성립가능하기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지역정체성이 지역과 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시각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지역정체성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며, 지역정체성의 수용 역시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지역정책이 추진되었던 한국에서는 지역정책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성되기도 했으며, 지역 브랜딩사업이나 지역마케팅사업 등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이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였다기보다 주도적 집단이 형성하고자 하는 정체성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화자(2005)는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시간적·공간적·사회적인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 실제로 인식하여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요소 간의 연결고리나 관계성의 인식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지역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과정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지역정체성의 수용이라는 개념이 사용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후의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왜 지역정체성에 대한 주민의 수용에 관해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던 국가가 거의 일방적으로 전국 공간을 재구조화하였고(손명철, 1995), 강력한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권위의 계층성과 권력이 강조되어 정책의 집행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의 수용에 관해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배제되었고,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부 유력자들의 논의를 통해 지역관측정책이 추진되어 결국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점차 주민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증진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문제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서는 정부와 전문가, 지역 주민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짜고 정책을 입안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장석정, 2012). 이는 각 사업단위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데, 과거에 정부주도형으로 일괄적인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던 것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사업지별로 사후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한 주체가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정체성에 주민이 적절하게 호응하지 않는다면 지역정체성은 결국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므로 지역정체성에 대한 주민의 수용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용'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수용은 대체로 순응 (compliance), 동조 (conformity) 등의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되며, 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정책은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적 차원의 규칙이나 목적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이지 않거나 정책이 의도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만큼 정책의 효과는 감소될 것이며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강제성·김종래, 1996).

정책의 수용과 관련한 연구는 정책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 수용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수용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강제성·김종래, 1996; 최연홍·오영민, 2004; 이음재, 2012)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정책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요인의 조절을 통해 정책수용집단에게 정책수용정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연구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체의 시행 이후 각 지자체별로 지역전략을 수립하면서 지역정체성 관련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수립되거나 강화된 지역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연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책에 대한 만족여부가 지역정체성에 대한 태도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부여의 경우, 지역정체성의 강화로 인해 삶의 공간이 크게 변화되었고 주민 역시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배려보다 역사적 진정성을 함양한다는 명제를 우선하여 그 결과 주민은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고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역정체성의 강화는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계획(planning)의 영역에서 다루었지만, 정부주도형 개발방식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주민참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역정체성 역시 지역민의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시의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그동안 일방적인 과정에 가깝게 진행된 지역정체성 형성 및 강화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과연 지역정체성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수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용에 관한 태도는 단일하지 않으며 정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용을 단일하게 인식하는 경우 정책대상집단의 표면적 행위만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주관적 행위가 정책과정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게 되는지, 즉 대상 집단의 능동적 역할을 다루지 못하고 그들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이종엽,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의 태도를 단일하지 않다고 가정하며, 수용 태도 중에서 부정적 수용(reluctant acceptance)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정적 수용이라는 개념은 비록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연구자에 따라 비판적 수용, 소극적 수용, 선택적 수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정도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체로 탐탁지 않거나 내키지 않음에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용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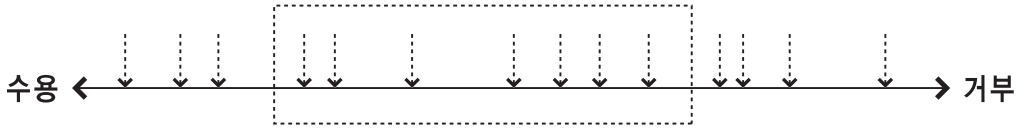
지역정체성의 부정적 수용계층 논의로 돌아오면, 지역정체성의 부정적 수용은 지역정체성에 단순한 불만과는 다르며, 완전한 거부와도 차이를 가진다. 지역정체성의 수용과 거부에 관여하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정체성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요인은 단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관여를 통해 부정적

인 수용태도를 견지한다. 즉, 지역 주민은 경제적 원인과 정책적 원인으로 인해 지역정체성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지만, 지역정체성에 대한 정서적 애착에 의해 불만의 정도가 완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정체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을 부정적 수용이라고 정의하고,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한다. 후자를 부정적 수용의 범주에 포함한 것은 이 계층을 단순히 정책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만이 있는 계층으로 간주하고 나면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에 대한 논의가 매우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심대해질 경우 지역정체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과 거부의 수직선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각 개인에 따라 수용과 거부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수용하는 계층과 완전한 거부 사이에 있는 계층을 묶어 부정적 수용 계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의 태도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불만이 있는 경우를 소극적 수용이라고 정의하고,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판적 수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부정적 수용을 소극적 수용과 비판적 수용을 합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부정적 수용 개념도

3. 부여의 지역정체성 강화전략

1) 일제강점기 관광지화의 시작

부여가 본격적으로 백제의 고도로 알려진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한 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제와 조선의 친연성을 백제와 일본의 친연성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부여를 ‘내선일체의 영지’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여 전역에 남아 있는 유적의 발굴과 문화재를 조사함과 함께 부여고적보존회를 통해 부여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의 생산과 유포를 꾀하였으며, 언론을 통하여 명승고적지로서의 부여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무렵부터 부여의 관광지화도 시작되었는데, 신문기사나 기행문으로 부여가 경주나 평양과 같은 유서 깊은 도시라는 사실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부여 8경과 같은 명승지의 소개를 통해 부여를 백제의 고도이면서 근대 관광지로 의미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인데, 1920년대까지만 해도 거론되고 있던 주요 관광명소가 금강산, 평양, 경주, 해운대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여가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언론의 역할과 함께 부여고적보존

회의 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40년 황기(皇紀) 2,600년 기념을 앞두고 수행한 ‘부여신도건설’은 ‘관폐대사 부여신궁’의 조영과 부여읍 전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근대 도시계획으로, 총 사업면적 44,240,000㎡, 광장 11개와 계획가로 37개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당시 15,000명 정도이던 부여군 인구에 비해 매우 큰 사업이었다. 이 시기에 일제가 수행한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제의 고도’로서의 부여가 아니라 ‘내선일체의 영지’로서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으로 이러한 계획은 완성되지 못하였고, 부여는 ‘백제의 고도’라는 이미지만을 강화한 채 광복을 맞았다.

부여는 광복 이후 대표적인 관광지가 없었던 당시 한국 상황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특히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인정받아 경주와 함께 수학여행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부여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부여 주민이 ‘백제의 고도로서의 부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부여군의 관광산업전략은 새로운 특성을 개발하기보다 ‘백제의 고도’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여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았는데, 관광산업의 기반이 문화재 위주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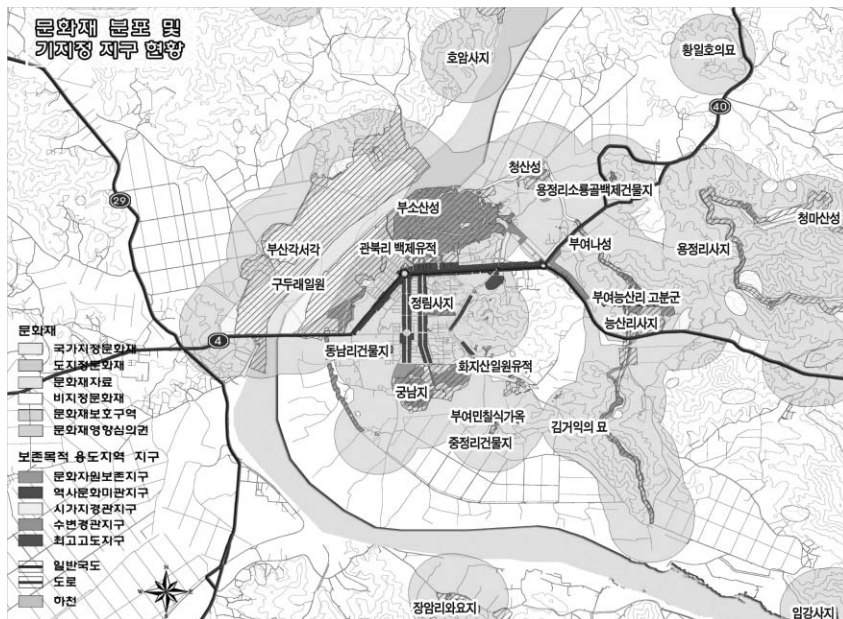
고 이는 일반인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발굴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굴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신속하게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획기적인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되지 않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숙박시설이나 식당의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조례에 의해 문화재 조사를 반드시 해야 했기 때문에 관광인프라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부여 주민들은 부여가 관광지로 매력을 잃고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2) 발굴 및 문화재 조사

백제의 고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여읍 일원은 수십 년간 발굴이 이루어졌다. 현재 사비도성으로

비정되는 부여읍 내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2009년 현재까지 누적횟수가 100회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부여박물관, 2009), 부여읍 전역은 문화재 영향심의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지에서도 유물은 계속 출토되고 있다. 부여군은 백제의 수도 위에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와 발굴지가 구분되지 않고 연속되어 있거나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물의 존재를 인지하고, 문화재 발굴에 관한 발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부여 주민들은 부여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속적인 발굴사업과 문화재조사가 부여 주민에게 준 영향은 유적의 발굴을 통해 미처 몰랐던 유적의 존재를 인지하게 하거나,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유물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해 주었다는 점이



(그림 3-1) 부여읍 문화재 관련 규제 현황도

다. 이와 함께 유적이 아닌 부여읍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조사를 하게 되면서 불편사항이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장기간 발굴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더욱 심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부여가 가진 역사적 진정성을 지키고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발굴 및 문화재조사로 인해 주민은 문화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의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으로 인한 부여의 수입이 점차 감소하자 부여 주민들은 자연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비교하게 되었고, 개발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적만 잔존할 뿐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유형의 문화재가 없다는 것도 부여의 약점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3) 백제문화단지 개발사업

백제문화단지²⁾ 개발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의 하나로,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에 '역사재현촌(28만평)' 과 '연구교육촌(11만평)' 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며 조성비용으로는 국비 244억, 지방비 339억, 민자 1,091억 등 총 1,674억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반부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고, 부족한 사료(史料)로 인해 고증의 정밀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또한 민간투자는 물론 당초 책정된 예산조차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고, 단지 내 토지보

상 및 시설계용역에 치중하여 역사재현촌의 부지조성조차 완성되지 못해 1998년에야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이후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가 상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의 증액과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두 번의 대규모 사업변경을 통해 사업면적과 사업비의 조정, 입지할 시설의 변화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했던 충청남도는 2007년 민간기업의 투자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2010년 완공하였다.³⁾

이 사업의 특징은 백제의 고도라는 점을 이용하면서도 부여읍에 입지하지 않고 부여읍과 거리가 있는 규암면에 입지하였다는 점인데, 역사적 진정성은 있지만 유적으로 인해 사업부지 확보나 사업진척이 어렵고 선불리 복원하기도 어려운 부여읍 지역에 입지하기보다 사업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연구를 통해 복원한 백제 왕궁이 원형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결국 사업권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백제역사의 복원과 재현, 지역개발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은 애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상업성이 짙어졌고 그로 인해 경제적 문제와 지역개발·지역정체성 강화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애초부

2) 1993년 당시 명칭은 '백제역사촌'이었으며, 이후 '백제역사재현단지'로 변경되었다가 2009년 백제문화단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3) 처음 명칭이었던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백제문화단지'로 명칭 자체가 바뀐 것부터 장소성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터 국비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지역정체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되는 사업이었는데, 민간기업의 참여로 인해 부여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주민의 관심사는 이미 역사재현단지의 역사성이나 진정성 논란에서 민간기업이 부여군에 미칠 영향에 맞춰져 있다.

4) 고도보존사업

‘옛 수도[古都]’ 지역의 경우 문화재분포지역이 넓고 문화재매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까닭에 고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장기간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훨씬 강한 규제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지역경제발전의 저해를 초래하였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보존과 정체성 회복의 기회를 상실한 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끄는 결과에 봉착했다. 더구나 문화재를 단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문화재가 아닌 것은 모두 개발할 수 있다는 지역민의 인식은 문화재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부여군, 2010).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을 둘러싼 문화환경의 보존과 함께 종전 문화재보호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주민의 재산권 보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2004년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도로 지정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중 가장 고도보존사업에 긍정적이었던 부여군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2012년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과 고도보존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고도보존사업소와

주민협의회, 고도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부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도보존사업에 호의적이었던 이유는 가장 먼저 경제개발에 대한 강한 열망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여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백제문화단지가 민간기업에 사업권이 이전되면서 실망과 함께 부여상권까지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했던 부여 주민들은 고도보존사업을 통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 혹은 볼거리가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시 백제의 고도였던 공주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비해 도시 규모가 작다는 점, 고도 중에서 유일하게 군(郡)이라는 점, 경주에 비해 남아 있는 유적이 적다는 점등은 부여 주민으로 하여금 백제문화단지나 고도보존사업과 같이 유형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에 호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 백제 왕궁지를 찾기 위해 관북리 일대를 장기간 발굴하는 모습을 지켜본 부여 주민들은 차라리 부여 전역을 다 발굴하더라도 왕궁지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태도는 왕궁지를 찾으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뿐더러, 관광객이 늘어나 앞으로 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이전의 사업과 달리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이나 이주단지 조성 등 주민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하지만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즉각 반영되기보다 보류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청의 의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세부내용이 바뀌기도 하며 이 과정에 대한 의견교환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5) 소결

부여가 '백제의 고도'라는 점은 사실(史實)이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지역정체성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일제는 부여를 백제의 고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친연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장소, 즉 내선일체의 영지로 만들기 위해 발굴과 관광사업을 통해 전국에 부여를 알리게 되었다. 광복 이후 부여는 '백제의 고도'임을 활용하여 일찍부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관광객의 존재는 부여 주민에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부여가 알려짐으로써 부여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였다.

이와 함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백제의 고도라는 정체성이 더욱 강해졌는데, 이는 지역개발이나 지역정체성 강화전략과는 무관한 문화재 정책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부여가 '백제의 고도'였다는 것이 실제적 진실로 다가옴으로써 관광객 유치나 자긍심 강화에 도움으로 주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역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90년대부터 추진된 백제문화단지 건설사업은 볼거리가 부족한 부여에 역사성을 강조한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백제의 고도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국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고, 지역 주민은 지역정체성에 도움이 되지만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관광단지를 경계하고 있다.

최근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고도 지역 주민이 받았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

여 「고도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부여읍은 특별보존지구와 역사환경문화지구로 나뉘어 지정되었으며,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주를 통해 전면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그간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백제왕궁의 발굴을 통해 백제의 고도로서의 부여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하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고도로서의 부여'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지역정체성으로 자리잡았다기보다 상기한 여러 사업을 통해 부여의 다른 특성을 압도하는 지역정체성으로 자리잡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은 부여 주민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지역정체성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즉, 주민은 '고도에 거주하는 자부심'과 '관광지'로서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중심으로 전달받았으며 지역정체성에 동의하도록 유도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은 발굴조사나 고도보존사업으로 인한 이주를 비롯해 건축행위의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유·무형 피해를 입기도 하였고, 백제의 자부심과 관광지로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백제문화단지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주민은 여전히 백제의 고도라는 점을 활용하여 부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백제의 고도라는 점에 자긍심과 애착을 갖고 있지만,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사업이 언제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는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태도가 균일하지 않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4. 지역정체성에 대한 주민의 태도

1) 지역정체성 수용 설문조사

부여 주민에게 부여에 관한 이야기를 청할 경우, 대부분 '백제의 고도로서의 부여'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연구자에게 '백제에 관해 공부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때로는 부여와 다소 관계가 없는 백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백제인'이나 '백제문화의 중심지'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부여 주민은 부여의 지역정체성을 '백제의 고도'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역시 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면담을 진행할수록 모든 주민이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백제의 고도'라고 지목할 뿐이지 그에 대한 감정은 각기 다른 층위를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부여에 관한 서술과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재에 관한 서술에서 유추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에 불만이 있는 발언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지역정체성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정책에 대해 갖는 불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부여군이나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층위로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을 접하였기 때문에 지역정체성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예전만큼 관광지로써 관광

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면담을 진행할수록 정책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지역정체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원인이 정책이나 경제적 원인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 설계

부여 주민이 지역정체성에 대하여 갖는 감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5일(월)과 6일(화) 양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연구지역인 부여읍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였고, 설문 도중 응답자가 문항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별로 부여읍 지역을 분할하여 설문을 수집하도록 하여 응답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사전 심층면접자들과는 별개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185부이며, 이 가운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한 유효표본 17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을 부여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문으로 수정을 거친 후 작성하였다. 문항은 ① 지역정체성에 대한 감정, ② 지역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주체, ③ 지역정체성에 대한 태도, 각 항목에 대한 후속질문과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Microsoft Office 2010 Exc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

〈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퍼센트)	구분	빈도(퍼센트)
성별		거주기간	
남성	98(55.1%)	10년 미만	25(14%)
여성	80(44.9%)	10~19년	58(32.6%)
합계	178(100%)	20~29년	31(17.4%)
연령		30년 이상	64(36%)
10대	42(23.6%)	합계	178(100%)
20대	18(10.1%)	직업	
30대	28(15.7%)	공무원	8(4.5%)
40대	33(16.5%)	관광객 식당	8(4.5%)
50대	32(18%)	지역민 식당	5(2.8%)
60대	15(16%)	관광객 자영업	6(3.4%)
70세 이상	10(5.6%)	지역민 자영업	44(24.7%)
합계	178(100%)	운수업	4(2.2%)
소득수준		농업	8(4.5%)
매우높음	3(1.7%)	직장인	18(10.1%)
높음	6(3.4%)	주부	15(8.4%)
보통	131(73.6%)	학생	52(29.2%)
낮음	22(12.4%)	기타	10(5.6%)
매우낮음	16(9.0%)	합계	178(100%)
합계	178(100%)		

사 분석에는 단순통계를 사용하였고, 부정적 수용 계층을 도출한 다음 각 계층이 항목별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파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4-1과 같다.

(2) 문항분석

먼저, 지역정체성에 대해 가지는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까지 7점 척도로 환산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즉, 1, 2, 3번에 응답한 사람은 지역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5, 6, 7번에 응답한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매우

긍정적(7)이었고, 그 뒤를 보통이다(4)가 이었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6건(10%)에 불과하고,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16건(65%)에 달한 것으로 보아 부여 주민은 대체로 지역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주·부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김봉한 외(2006)의 연구에서도 부여 주민은 역사도시로서의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각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해보았다. 먼저 이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파악하였는데, 각 그룹별로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략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드러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거주한 경향을 띠는데 연령과 거주기간의 경향성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연령은 높지만 거주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계층이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부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결혼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이주한 계층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이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질문으로 각 응답에 대한 이유를 고르도록 하였는데, 가장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도로나 산업시설 등이 들어오지 못해 부여의 발전기회를 막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건, 발굴비용이나 이주 등으로 부여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건, 다른 역사도시(경주, 공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건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기타의견으로 '불필요한 문화재지역, 도시공원지역으로 인해 묶여있는 땅이 너무 많다.' 는 의견이 있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부여를 다른 지방에 널리 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0건이었고, 부여 주민의 단합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건, 부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0건, 다른 의견이 2건 있었다. 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부여의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부여의 지역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역

사교육이라는 의견이 64건, 문화재청이라는 의견이 4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부여군청(29건), 주민(18건), 부여 내 단체(14건), 국회의원(12건)의 순의 답변이 나왔다. 이는 역사교육을 통해 부여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라는 점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며,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통해 부여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은 부여군 각지의 문화재 발굴과 문화재조사, 고도보존사업 등으로 부여의 지역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정체성의 수용에 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태도를 제시하고 고르도록 하였다.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92건,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이 좋지만, 국가나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불만스럽다는 의견이 62건,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13건,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으며,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1건이었다,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0%가 넘는 것으로 미루어 부여 주민들이 대체로 부여 또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지역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김봉환 외, 2006; 문화재청, 2008)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의견이나, 백제의 고도라는 점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대안이 없

어서 받아들인다는 의견, 백제의 고도라는 점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적으나, 여기서 62건(34.8%)을 차지한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이 좋지만, 국가나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불만족스럽다’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계층은 부여가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관해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에만 국한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선행한 질문(지역정체성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에 모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들 중 어떤 계층은 부여가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 자체에 불만을 갖고 있는 계층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이 좋지만, 국가나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 정책상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후속질문을 실시하였다. 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이 29건, 규제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실제로 받는 피해에 비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27건, 다른 의견이 6건이었다. 다른 의견의 경우, 백제 수도에 걸맞는 개발사업이 미흡하다, 정부의 협조가 미흡하다,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너무 허술하다 등이 있었다.

또, 백제의 고도로 알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한해 새로운 지역정체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는데, 수박이나 멜론 등 농산물의 고장이라고 대답한 의견과 백마강의 고장이라고

대답한 의견이 각각 4건, 연꽃의 고장이라고 대답한 의견이 2건, 다른 의견(산업도시)이 1건이었다.

2) 부정적 수용계층 확인

앞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을 통해 부정적 수용계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전체의 7.3%(13건)를 차지하며, 지역정체성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대안이 없거나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수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수용하는 계층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계층에 비해서도 뚜렷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정체성 논의나 지역정책 추진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되었다. 하지만 이 계층만을 부정적 수용계층이라고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이들이 지역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대한 낮은 애착도에서 기인한 무조건적인 불만 토로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수행에 있어서도 정책에 대한 10% 내외의 불만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나아가 왜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정체성 관련 정책이 소홀히 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에 대한 감정을 부정적이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지역정체성에 대한 태도에 국가나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자 역시 부정적 수용계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연구대상은 총 43명이며, 이는 총 설문대상의 24.2%를 차지한다.

이는 부정적 수용계층의 비율을 늘림으로서 연구에 용의성을 도모하고 현장의 보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수용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지역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을 발굴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들은 지역정체성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지만, 정책이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정적 수용에서 긍정적 수용으로 태도를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계층은 지역정체성에 선뜻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지는 않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지역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불만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응답한다.

이들은 남성이 19명, 여성이 24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고, 40대(20.9%)와 50대(23.3%)의 비율이 높다. 전체 설문대상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이 비율이 역전되었으며, 저연령(1~20대)이 상대적으로 적다. 거주기간은 큰 차이 없이 추세에 있어 유사하게 나타난다. 직업군은 지역민 자영업(27.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생(20.9%), 주부(16.3%) 순이었다. 지역민 대상 자영

업과 학생의 경우는 전체 설문조사에서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주부는 전체 설문조사에서 8.4%를 차지했는데 부정적 수용계층에서는 그 두 배인 16.3%를 기록하였다는 점이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또 공무원과 지역민 대상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계층에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고 하겠다.

이들은 지역정체성에 대한 감정이 평균 3.69점으로, 설문조사대상 전체평균이 5.3점인데 반해 약 1.5점 정도 낮게 나타났다. 지역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체는 문화재청(13건)이 가장 높았고, 부여군청(8건), 역사교육(7건)과 부여 주민(7건), 국회의원(6건) 부여 내 단체(1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설문과 비교했을 때, 지역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주체에서는 문화재청과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수용계층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대체로 문화재청이나 국회의원, 부여군청 등 강한 권력을 가진 주체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부여 내 단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하다. 반면 부여 주민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이 주

〈표 4-2〉 부정적 수용 계층 확인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총합계
	1	2	3	4	5	6	7	
①			2	15	9	28	38	92
②	3	5	2	20	6	10	16	62
③	2			5	2	3	1	13
④ ⁴⁾	1		1	6	1		2	11
총합계	6	5	5	46	18	41	57	178

- 4) ① 부여가 백제의 수도로 알려지는 게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부여가 백제의 수도로 알려지는 것이 좋지만, 국가나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불만족스럽다
- ③ 부여가 백제의 수도로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부여가 백제의 수도로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으며,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4-3〉 부정적 수용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퍼센트)	구분	빈도(퍼센트)
성별		거주기간	
남성	19(44.2%)	10년 미만	8(18.6%)
여성	24(55.8%)	10~19년	9(20.9%)
합계	43(100%)	20~29년	8(18.6%)
연령		30년 이상	18(41.9%)
10대	8(18.6%)	합계	43(100%)
20대	3(7%)	직업	
30대	7(16.3%)	공무원	0(0%)
40대	9(20.9%)	관광객 식당	1(2.3%)
50대	10(23.3%)	지역민 식당	0(0%)
60대	3(7%)	관광객 자영업	3(7%)
70세 이상	3(7%)	지역민 자영업	12(27.9%)
합계	43(100%)	운수업	2(4.7%)
소득수준		농업	3(7%)
매우높음	0(0%)	직장인	2(4.7%)
높음	0(0%)	주부	7(16.3%)
보통	29(67.4%)	학생	9(20.9%)
낮음	6(14%)	기타	3(7%)
매우낮음	8(18.6%)	합계	43(100%)
합계	43(100%)		

목할 만한 점인데,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부여 주민은 국회의원이나 부여 내 단체보다 부여 주민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5. 주민의 부정적 수용

1) 부정적 수용 원인

본 장에서는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 수

용의 원인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 차원의 경제문제

백제의 고도이며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도 않고 오히려 매장문화재로 인한 강한 규제에 묶여 살았던 부여 주민에게 문화재는 급기야 경제 발전의 방해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부정적 수용계층은 부여가 충분히 발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인한 규제 때문에 발전이 늦어졌으며, 문화재 규제만 아니었으면 큰 공장이나 회사가 들어와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남 다른 시군과 인구 유출정도를 비교했을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군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부여읍의 인구는 1990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지만 부여군 전체 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아 부여읍을 제외한 부여군에서 인구 전출이 심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부여군은 부여읍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권을 제외하면 구룡평야, 부여읍의 왕포들, 남면들, 세도들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업군(郡)이므로 부여군의 인구감소는 문화재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농촌인구감소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 부여군 외곽에 있어 문화재의 영향이 크지 않은 지역에 입지한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높지 않은 점 역시 부여가 문화재로 인해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화재를 가장 먼저 꼽는 것은 그만큼 문화재가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부여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문화재를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크게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문화재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역시 이러한 불만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여는 연간 300만 명 정도가 찾는 관광지이지만, 관광지 전체를 둘러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공주와 연계하여 하루 정도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지에서 받는 입장료를 제외하고 숙박업이나 식당 관계자가 체감하는 관광수입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부정적 수용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 개인적 차원의 경제문제

부여 주민에게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이 가장 큰 불만으로 다가오는 지점은 문화재로 인한 개발규제와 개인의 경제적 이해가 충돌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정책은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의 국가 귀속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문화재가 사유물일지라도 그것이 지정되면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일정한 규제와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문화재분포지역이 넓고, 문화재매장가능성이 높은 고도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경우는 장기간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훨씬 강한 규제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부여군, 2011). 문화재로 인한 규제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려워지고,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건축조례로 인해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으며, 건물을 짓기 전에 시·발굴조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하다보니 자연히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건물가격에 반영된다. 게다가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보니 건물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거쳐 부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주변 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는데, 높은 부동산 가격은 부여에서 외지로 인구가 유출되는 배출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발굴비 부담과 공사기간의 연장이 공사 당사자 개인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라면, 그로 인한 건축비의 상승과 주택난은 공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여 주민이라면 누구나 겪거나

공감할 수 있는 피해였다.

심지어는 발굴예정지로 지정되면 발굴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대체로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북리 백제유적 부지인데, 부여군에서는 이주단지에 투입되는 예산 뿐만 아니라 추정왕궁지 매입비용, 발굴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평생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 이주하는데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특성상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주민의 다수가 경제능력이 없거나 낮은 노인 계층인데, 이들에게 용자를 통한 건축비용 보조를 한다고 해도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괄매입대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별 가구를 매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은 다소 늦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개발계획의 표류

정책의 문제도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데 한 축을 담당한다. '백제의 고도'는 역사적 사실이었으나,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이었다. 부여읍 지역에 시행된 문화재정책이나 도시계획의 핵심은 '백제의 고도'로서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부여의 지역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역사성과 진정성의 강화를 위해 주민 재산권의 침해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장이나 사정은 소외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에 불만을 가지는 것

도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고도'라는 점은 부여의 다른 어떤 속성보다 강력할 뿐 아니라, 자랑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모습이기도 했으므로 불편을 수인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게다가 정책이 제시하는 앞으로의 발전방향 역시 백제의 고도로서의 부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으므로 부여 주민은 정책에 불만이 있더라도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여에 추진된 여러 정책은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소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로 인해 부여 주민은 정책이 실현되면 도달될 모습에 기대하다가도 더딘 사업 진행에 실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면 '백제의 고도'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부여군과 관련된 국토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백제의 문화유적, 역사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부소산 내 정비계획, 관북리지역의 역사가로경관조성, 구드래나루터 주변 조성 및 정비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모두 무리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예상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비왕궁지구 매입 및 이주단지 건설조차 예산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여 주민들은 예산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문화재 정책 논의에서 우선권이 밀리는 것에 불쾌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부여군에 대한 자조와 정책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향후 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4) 개발사업논의에서 소외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정체성은 정책을 통해 구체

화되었으며 정책에 대하여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은 지역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 즉,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고 변경되면서 주민은 실망하게 되고, 정책 결과물이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라져 자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며 종내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개발계획의 표류 때문만은 아니다.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역사성과 진정성의 강화를 위해 주민 재산권의 침해나 경제적 피해를 강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장이 소외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부여만이 아니라, 문화재관련사업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그래왔다. 즉, 문화재관련 사업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역 주민에게 거의 전달된 바가 없었고,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막연한 불안감과 현실적인 불편을 견뎌야 했던 것이다.

주민의 입장이 소외됨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피해보상책이 무엇인지에 관해 거의 논의된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이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고, 그들이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문화재정책과 마찰이 발생한 주민은 오랜 세월동안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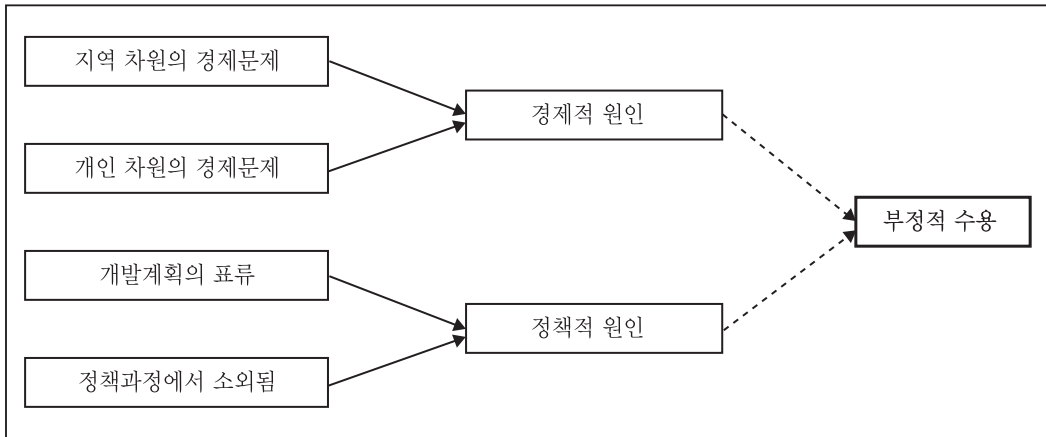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은 결국 정책에 대한 냉소나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책에 관해 개인이 어떠한 태도를 갖든 정책이 운영되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정책 집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권력이 개입되면 개인은 무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여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삶의 공간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각종 정책에 마냥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정책 수립과정이나 정책 시행 전에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력'의 문제를 갈망하게 되었다. 면담 중에 현재 정치권에서 은퇴한 부여 출신 정치인에 관한 언급이 빈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여 관련 개발계획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보다 절차상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방향에도 부합하고 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원인을 도식화하면 그림5-1과 같다. 지역차원의 경제문제와 개인차원의 경제문제는 경제적 원인으로 묶을 수 있고, 개발계획의 표류와 개발사업논의에서의 소외는 정책적 원인으로 묶을 수 있다. 다시 경제적 원인과 정책적 원인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밖에도 정서적 원인이나 사회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역정체성 수용 문제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원인은 경제적 원인과 정책적 원인이고, 그에 따라 경제적 원인과 정책적 원인에 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였다. 경제적 원인은 개인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원인은 지역정체성을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경제적 원인이나 정책적 원인으로 인해 지역정체성에 불만이 있더라도 쉽게 부정적 수용으로 태도를 전환하지 않으며, 부정적 수용의 태도를 견지하더라도 완전히 거부하는 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개인에 따라 태도의 차이를



(그림 5-1) 지역정체성의 부정적 수용과정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2) 지역정체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

만일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정체성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왜 지역주민은 지역정체성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또는 지역정체성에 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매우 적었고, 부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역정체성을 거부하거나 문화재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역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설파하며, ‘백제의 고도’가 부여 주민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는 부여 주민들이 지역정체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지역정체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체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함

지역 주민이 지역정체성에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정체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제의 고도’라는 점이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1400년 전 백제의 고도였고, 그와 관련한 역사적 유적이 부여읍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백제의 고도라는 점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도 지역정체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지역정체성의 기본 개념이 내적 동질감과 외적 구별성이라고 할 때, 백제의 고도는 외적 구별성에서 탁월성을 지니는 것이다.

(2) 경제적으로 이득을 줌

백제의 고도라는 점 때문에 대규모 공사가 어려워 그로 인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여가 관광도시로 기능할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여가 백제의 고도였기 때문이다. 백제의 고도라는 점은 부여 주민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부여에 주어진 자산이었고, 부여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탁월한 지역자산을 통해 지역홍보와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부여군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농업과 관광을 통한 소득 증대이며, 부여 주민 역시 제조업을 통한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공장이 들어와야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조차도 부여가 백제의 고도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유명해질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었다는 생각은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로서의 매력력이 떨어지고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라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자 지역정체성으로 인한 이득보다 불만이 상대적으로 커져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된 것이다.

(3) 정서적 자부심

부여 주민은 백제의 고도에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 강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지역정체성에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역정체성을 거부하거나 대체할 지역정체성을 만들어야한다는 사고를 어렵게 한다. 정서적 자부심은 지역정체성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정체성에 대한 불만이 부정적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지역정체성이 가지는 효용에 관해 고민할 지점을 제공해 준다. 지역정체성은 그동안 대외적인 차원에서 지역홍보의 수단으로 활용

되거나, 대내적으로 지역결속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는데, 지역브랜드사업이나 지역마케팅과 결합하면서 지역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보다는 대외적인 홍보수단으로 더욱 활발히 활용되었다. 그러나 지역정체성이 지역 구성원에게 공유된다면,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문화재로 인한 불편을 더 수인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문화재로 인한 갈등상황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비단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이 개인의 삶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정서적인 면을 만족시켜준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불만을 상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공유시키고 강화하는 데 급급하고 보상체계를 미진하게 갖추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3) 소결

전장에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모두 지역정체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이 왜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들은 지역정체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도 하고,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부정적 수용’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측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이유’,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였다. 부여는 매장문화재로 인해 대규모 사업이 어려우므로 대규모 공장이나 도로건설 등이 어렵고, 그로인해 지역경제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재 발굴 비용을 부담하거나 문화재 발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던 정책이 지지부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정책에 실망하게 되고, 이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던 정책의 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소외받는 경우에도 지역 주민은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정체성이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거부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편을 주더라도 불편을 상쇄하고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지역정체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통해 수용과 거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객관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측면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6. 요약 및 결론

정책의 수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정책과 지역정체성을 분리하여 생각하기보다,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지역정체성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으로 도식화하여 이해하거나 정책 만족의 한 요소로 지역정체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감정 자체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였고, 주민의 의견이나 시각을 반영하지 않는 지역정체성 확립이 과연 지역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의 형성이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정체성의 부정적 수용’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간 지역발전전략에 의해 지역정체성이 형성된 지역인 충청남도 부여군으로 설정하였다.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백제의 고도’라는 지역정체성이 확립된 곳이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장소에서 산다는 것은 주민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정체성의 강화전략은 백제의 고도로서의 부여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보존위주의 정책은 주민의 일상공간에까지 제한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결국 주민들은 ‘백제의 고도’라는 점을 자랑스러운 지역정체성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이 있다”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세부적으로 ①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인지, ②왜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지에 관해 고찰하였다.

먼저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계층의 존재를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계층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지역정체성에 불만이 있지만 대안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경우와

둘째, 지역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은 없지만 대안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이들이 지역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였다. 부여는 매장문화재로 인해 대규모 사업이 어려워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재 발굴 비용을 부담하거나 문화재 발굴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던 정책이 지지부진하는 경우 정책에 실망하게 되고, 이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던 정책의 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소외받는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정체성이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거부하지 않는다. 또 정서적으로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편을 주더라도 불편을 상쇄하고 지역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지역정체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통해 수용과 거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객관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정서적 측면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지역정체성 형성전략 패러다임은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전문가에 의해 하향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지역정체성 형성이 주민 단위에서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정체성을 형성할 때 더

욱 지속가능하고 지역이 가진 본래의 성격에 부합할 것이라는 사고에서 등장한 것이다.

현재 추진하는 부여 관련 개발계획 역시 그 기본목표가 인간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삶의 도시라면, 일방향적인 계획이나 전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식과 시각차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부여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형성해야 할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지 못하고 격리된 문화재보존은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단순히 역사 속에 살아남은 유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문화재 보존의 공간이 아니라 한 개인이 거주하는 삶의 공간으로 부여를 바라본다면 지역정체성의 형성의 향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장소를 장소답게 하는 것이고, 장소에 사는 사람이 보다 근원적 의미에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봉한·정환영·이정만·원성수·조인성·채진익·장동호·최병학, 2006, 백제고도 공주·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도시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3), 89~107.

김준, 2002,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만들기, 경제와사회 53, 56~62.

김지희, 2004, 오피스밀집지역의 장소상품과 장소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배, 1994, 한국 도시경관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경관과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우주, 2009, 거주민의 삶을 통해 본 학 팔거리 장소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은진, 2008, 군 북부경험이 안보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성현, 2012, 도시 브랜드에 대한 소고: 도시 이미지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리서치 2012년 봄호, 12~16.

윤택림, 2008, 과천 신도시의 주민 되기: 구술생애사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형성 분석, 역사문화학회 11(2), 307~349.

이강형·문종대, 2006, 지역민들의 '지역정체성' 이 지역뉴스 시청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6(3), 342~377.

이경현, 2012, 완도군 보길도의 지역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민, 2006, 서울 강남의 사회적 구성과 정체성의 정치: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1~14.

이음재, 2012, 한국 유아교육기관의 정책 수용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교육질 향상을 위한 제도분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록, 2001, 지방도시의 발전정책에 관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 전남 순천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23~35.

임화자, 2005, 지역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부

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2(1), 179~198.

장석정, 2012,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평가지표 분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근식, 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140~166.

정혜숙·김혜순, 2004, 생활 터전으로서의 지역,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685~690.

조아라, 2007, 문화관광지의 지역성 재구성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연홍·오영민, 2004, 정책 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 갈등 사례, 한국정책학회 13(1), 297~333.

최협, 1998, 전남 지방의 문화적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호남문화연구 26, 237~251

추명희, 2002, 역사적 인물을 이용한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 형성 전략: 영암 구림리의 도기문화마을만들기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 326~346

홍석준, 2003, 지역축제를 통해 본 지역정체와 정체성: 전남 영암, 영보 풍향제의 사례, 지방사외 지방문화 6(2), 85~126.

2. 단행본 및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부여 관북리유적 발굴보고 V: 2001~2007년 조사구역 통일신라시대 이후 유적편.

국토연구원, 2011, 문화국토를 위한 고도육성방안 심포지엄.

남상희, 2001, 공간과 시간을 통해 본 도시와 생애사 연구: 독일 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문화재청, 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부여군, 2010, 부여 고도의 육성 및 주민지원조례제정연구.

부여군, 2010, 부여 사비왕궁지구 경관 기준 작성 연구.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부여군지.

채미옥, 2009, 고도육성정책 및 주민지원방안. (발표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10, 충남의 정체성 연구.